

# 미래차 전환 정책 한눈에…“자동차 생산 60만대 실현”

## 광주시-10개 기관, 기업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AI모빌리티 시범도시·자율주행 실증도시 등 소개

광주시가 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미래 전환 여력을 높이기 위해 10개 기업 지원기관과 협력해 지원사업을 한자리에 모아 안내했다.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미래차 대전환 결의 및 기업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연기관 중심의 지역 부품사들이 급변하는 미래차·자율주행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신현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기업·협회 관계자 등 모빌리티산업·학

·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과 광주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종소벤처기업진흥

공단 광주지역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남기술실용화본부,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분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광주산학융합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R&D) 지원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활용 △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미래차 전환 기업 저금리 금융 지원 △친환경 자동차부품 시험·인증·평가 지원 △공용실험실·전용연구실 지원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미래모빌리티 자동차융합 산학협의체 지원 등 기관별 특화 사업을 소개했다.

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국가시

·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과 광주

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종소벤처기업진흥

밸리티 역량을 결합해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적주형 AI 기술·실증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은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지역 자동차 생산량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관세와 고환율, 고물가 등 ‘3중 고고’ 속에서도 58만600대로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기록했으며, 수출량은 39만1207대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올해 자동차 생산량 60만대 시대를 열고 ‘부강한 광주전남’의 원년을 만들기 위해 지역 모빌리티 산업 관계자들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부품업체 대표는 “미래 전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지만 어떤 사업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다”며

“10개 기관이 통합 정보를 제공해 사업계획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광주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차 대전환 결의 및 기업지원사업통합 설명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자동차 생산 60만대를 향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미래차·자율주행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부강한 광주전

남의 새 시대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라

며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와 자율주

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광주전남에 대한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주시, 전기차 2279대 구매 보조금 지원 승용차 최대 754만원·화물차 1365만원

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2279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1930대, 전기화물차 330대, 전기승합차 19대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전기승용차·중·대형 기준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 중형 기준 최대 6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기차 보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택시·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5%를 별도로 배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이다.

올해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폐차·폐차)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을 주기로 지원한다. 다만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지원금은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으로, 노후 차량 감축과 친환경 차 전환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20~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원,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주기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을 두 기업·단체 등이다. 기준 ‘광주 거주 90일 이상’ 요건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해 시민과 청년층 까지 지원되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기차 보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택시·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5%를 별도로 배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이다.

올해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

차를 전기차로 교체(폐차·폐차)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을 주기로 지원한다.

다만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지원금은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으로, 노후 차량 감축과 친환경 차 전환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20~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원,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주기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을 두 기업·단체 등이다. 기준 ‘광주 거주 90일 이상’ 요건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해 시민과 청년층 까지 지원되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기차 보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택시·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5%를 별도로 배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이다.

올해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

차를 전기차로 교체(폐차·폐차)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을 주기로 지원한다.

다만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지원금은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으로, 노후 차량 감축과 친환경 차 전환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20~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원,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주기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을 두 기업·단체 등이다. 기준 ‘광주 거주 90일 이상’ 요건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해 시민과 청년층 까지 지원되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기차 보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택시·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5%를 별도로 배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이다.

올해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

차를 전기차로 교체(폐차·폐차)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을 주기로 지원한다.

다만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지원금은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으로, 노후 차량 감축과 친환경 차 전환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20~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원,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주기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을 두 기업·단체 등이다. 기준 ‘광주 거주 90일 이상’ 요건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해 시민과 청년층 까지 지원되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기차 보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택시·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5%를 별도로 배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이다.

올해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

차를 전기차로 교체(폐차·폐차)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을 주기로 지원한다.

다만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지원금은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으로, 노후 차량 감축과 친환경 차 전환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20~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원,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주기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을 두 기업·단체 등이다. 기준 ‘광주 거주 90일 이상’ 요건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해 시민과 청년층 까지 지원되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기차 보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택시·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5%를 별도로 배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이다.

올해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

차를 전기차로 교체(폐차·폐차)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을 주기로 지원한다.

다만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지원금은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으로, 노후 차량 감축과 친환경 차 전환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20~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원,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주기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을 두 기업·단체 등이다. 기준 ‘광주 거주 90일 이상’ 요건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해 시민과 청년층 까지 지원되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기차 보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택시·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5%를 별도로 배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이다.

올해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

차를 전기차로 교체(폐차·폐차)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을 주기로 지원한다.

다만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지원금은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으로, 노후 차량 감축과 친환경 차 전환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20~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원,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주기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을 두 기업·단체 등이다. 기준 ‘광주 거주 90일 이상’ 요건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해 시민과 청년층 까지 지원되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기차 보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택시·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5%를 별도로 배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이다.

올해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

차를 전기차로 교체(폐차·폐차)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을 주기로 지원한다.</